남북, 65년만에 한반도 중앙 도로개선 추진

국방부,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서 작업 사진 공개
양측 책임 군 지휘관이 MDL 표지판 옆에서 '맞손'

남북한 군이 정전협정 후 65년 만에 한반도 중앙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는 작업 중 만나 손을 맞잡았다.

국방부는 22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이 전술도로를 개설하는 작업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우리 군 장병 10명과 북한군 장병 10여명이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이라고 적힌 노란색 표지판을 사이에 두고 집결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북한군 병력 뒤로는 도로 개설에 투입된 굴착기와 불도저가 있었다. 병력 중 일부는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상호 경계심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사진에는 남북한 병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측 책임 지휘관이 MDL 표지판 옆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도로개설을 위해 우리 군은 육군 5사단 공병부대가 투입됐다. 북한군은 화살머리고지 일대를 책임구역으로 하는 5군단 병력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소속 군인이 도로개설 작업과 관련해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의 사진도 있었다.

우리 군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 인근 GOP(일반전초) 통문 앞 비마교 앞에서 MDL까지 폭 12m, 길이 1.7㎞의 비포장 전술도로를 개설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측 공동유해발굴 예정지를 따라 MDL까지 도로개설 작업을 진행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은 남북이 양측 지역에서 도로개설 작업을 진행하면서 MDL 인근에서 자연스럽게 조우하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도로개설은 폭 12m의 비포장 전술도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형 및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축소된 도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MDL 인근에서 조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각각 MDL을 사이에 두고 개설한 도로를 연결했다. 남북이 전술도로를 조성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이다.

경의선(2003년 10월), 동해선(2004년 12월)과 같이 남북을 오가는 민간인이 사용하는 도로는 아닌 유해발굴을 위한 전술도지만 3번째 남북 연결도로가 생기는 셈이다.

국방부는 22일 남북군사당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에 따라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MDL인근에서 상호 조우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남북은 올해 말까지 도로 연결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전기와 통신선로와 함께 유해발굴 공동사무소도 개설할 예정이다.

남북은 내년 4월 공동 유해발굴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연결한 도로를 이용해 인원이나 차량이 MDL을 상호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설된 도로는 정전협정 체결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 가운데에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열어 과거의 전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공동유해발굴을 실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 현안해결 주력 국토균형발전 이바지"

안호영 의원, 민주 지방혁신 균형발전 추진위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추진위원으로 임명돼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단장 윤호중) 발대식 및 토론회'에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은 국토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의장 이해찬) 산하로 발족됐다.

추진단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실행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안, 정책개발 등을 통해 당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이 혁신의 중심이 돼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와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전북의 여러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고려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의 추진위원으로서의 전북 현안해결에 더욱 힘쓰고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법률가들, "'사법농단' 탄핵·특별재판부 설치를"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률가 600여명이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률가 631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회장 등은 "지난 반 년여간 법원이 보인 모습은 법원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 수사 비협조 등 사법부가 보여준 일련의 태도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서 사법부 내 최고위 법관들을 포함해 법관들 다수의 조직적 관여 전모가 드러났다"며 "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헌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적 사항은 국회의 입법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데도 그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이러한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논의는 헛돌고 있고, 그 와중에 대법원이 위헌론을 내세워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사법농단 법관들이 그 자리에 남아 사법농단을 심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도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행해야"

도의회 김희수 의원

학교 교육과정 중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교육위원회·전주6) 의원은 22일 "도내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던 공동교육과정을 실시간·쌍방향 온라인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방향 동영상 수업 중심에서 실시간·쌍방향 참여형 수업"이라면서 "특히,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거꾸로 수업, 블랜디드 러닝, 토론 등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에서 2018년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참여 시·도교육청은 총 11곳으로, 2017년부터 참여한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충남, 전남, 대구, 경남 2018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시도교육청은 울산을 비롯해 부산, 경기, 세종, 강원도교육청이다. /김진성 기자

YS 3주기… 추모식 참배 위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와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3주기 추모식에서 참배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